



2013. 8. 30 (금) 조간 (온라인 8. 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거시경제팀 한선희 연구원 (02-731-2442)

국민경제자문회의 제2차 회의 개최

-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실현 -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8.29일(목),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장) 주재로 민간자문위원 및 정부위원, 경제단체 및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KDI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금융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작성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와, 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에서 KDI와 합동으로 작업한 「창조경제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중산층 복원에 대한 논의에서는 중산층 현황에 대한 진단과 정책방향의 밑그림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해야 할 중산층 정책의 골격을 제안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산층 비중하락이 인구구조, 사회안전망, 교육 불평등 등 주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진단하였으며, 중산층 복원 전략으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기초로, 복지·교육분야 정책 등을 추가한 다차원적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창조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기업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이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인식 점검결과, 창조경제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정책 체감도 및 적극적 참여의식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완방향으로는 민간 기업 선도의 창조적 협력 관계 구축 등 민간

주도의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이 제언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문위원들의 좋은 제언과 연구에 대한 노고에 격려하고, “중산층 70% 복원과 창조경제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ICT를 활용한 교육 확대 방안, 기존 입법조항 중 독소조항 점검,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평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동안 참 고민도 많이 해주셨고 좋은 제안과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것을 좀 해봤으면 하고 고민했던 것 또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반갑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실천에 옮긴다면 “중산층 70% 복원과 창조경제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믿음과 자신감을 저도 갖게 됐습니다.

(ICT 실생활 활용이 중요) 우리가 ICT 강국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국민 실생활에, 일자리 창출에, 교육 질을 높이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되게 활용했나 하는 것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도 들어주셨지만 도서 벽지라든가 지역마다 교육의 혜택을 받는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ICT 기반으로 수준 높은 강의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확산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창조경제는 사실은 중산층 복원도 그렇고 얼마나 인재들을 키우고 계층 이동이 가능하게 만드느냐 이런 데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ICT 기술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계층에 관계없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더 연구해주셨으면, 정책적으로도 실천이 됐으면 합니다.

(경제정책 목표의 우선순위)정부의 경제정책 목표가 너무 여러 가지면 정신이 없고 집중이 안 돼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모든 하반기 우리 경제 정책의 최고의 목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그것 이상 가는 목표가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천명했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고용복지가 그것과 동떨어진 이야기냐? 절대 그렇지 않고 경제민주화가 완전히 또 이것과 동떨어진 이야기냐? 그게 아니고 다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맞게 맞춤형 고용복지도 가야 되고 경제민주화도 가야 됩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기업의 투자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옥죄는 식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로 약자의 설움 때문에 뜻을 펼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이것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도 부정적인 작용이 아니라 약자들도 신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합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이나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으면 계속 복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국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은 경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고용복지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런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느냐 이것도 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중요한 목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우리 몸도 뇌와 발이 전부 연결 돼서 같이 가야 건강도 유지하고 일도 할 수 있듯이 고용복지 정책이나 경제민주화 정책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하면 기여하느냐 하는 그런 목표로 추진되어야 결국은 따로 놀지 않고 전체가 다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규제 완화 부분도 어떻게 하면 투자를 활성화 하느냐 하는 쪽으로 하고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목표는 오로지 하나, 그것을 향해서 모든 것이 가도록 짚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밀한 정책 추진) 구직자들이 또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거나 구직을 하기까지 많은 정책을 쏟아내는 데도 이것이 실감이 안 된다 또 구직난은 중소기업에서 여전하다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어딘가에 허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이 꼭 취직을 하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다니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곳에 허점이 있다, 이곳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missing link) 체감이 안 되는구나 해서 정책적으로 좀 더 부모 같은 마음으로 아주 세밀하게 챙겨야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도록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입법의 부작용 점검) 많은 입법이 쏟아지고 있는데 좋은 의도로 했지만 독소조항이 되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무지무지 고통이 되는 수가 있고 투자의욕을 꺾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은 걸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제자문회의에서 한번 그런 의도 안한 독소조항 같은 것을 거르셔서 국민공감대를 통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한 번 해주는 것이 또 하나의 손톱 밑 가시 뽑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제품이나 모든 서비스가 애프터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도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정책을 만들고 입법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 이것이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정부에서도 배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관창조경제기획단) ‘민관창조경제기획단’ 만드는 것 저도 적극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매출도 올려야 되고 실제 시장에서 환영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실함이 있어서 좋은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많은데 정부에서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관창조경제기획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생산적인, 현실에 맞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또 정부에서는 어떻게 뒷받침하면 좋을지 의논해서 창조경제가 하루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점점 강화와 서비스업 활성화)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벤처나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화 하는 역량은 대기업에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서로가 열심히 할 수 있지 한 쪽에서 주고 한 쪽에서 받기만 하면 이것은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접점을 찾아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주시고 내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그것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몇 년 째 정부마다 노력했지만 이해관계에 부딪쳐서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해주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것이 윈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서비스 완화가 헛구호에 끝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회의에서 많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 ‘선취업 후진학 제도’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는 이것은 내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의욕을 갖고 할 때 공부지, 입시를 위해서 그냥 해야 되니까 시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고 또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취업하고 하다 보니 ‘나 이것 배워야지 안 되겠다’ 해서 대학을 간다면 그 공부를 누가 옆에서 재촉하지 않아도 밤을 새서 공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활성화한다면 정말 공부를 하겠다는 의욕을 가진 많은 인재들이 대학에서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평생 학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평생학습으로 가야지 한 번 공부하고 끝나서는 이것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 충분히 반영해서 중산층 복원은 기재부, 창조경제 활성화는 미래부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자문위원님들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정책을 추진해나가는데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 이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기로 해서 창조경제 활성화와 중산층 복원을 위한 구체적 실행에 박차를 가해서 하반기 중에는 꼭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청와대 제2차 국민경제 자문회의 관련 대변인 브리핑(2013.08.29)